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정훈, 김을식, 이다겸*

본 논문은 Weisbrod & Hansen(1968)가 제안한 소득-순자산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산층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계층 이동 요인을 분석한다. 소득-순자산가치는 저량(flow)인 순자산을 연금화(annuitizing)하여 유량(flow)인 소득에 합산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가 측정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소득-자산 기준 모두에서 근로가구원수는 경제적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득-자산 기준에서 부동산의 보유 여부가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이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산의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빈곤 탈출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우리의 분석결과는 중산층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 들어가는 글

중산층은 한 사회의 안정과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구소득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중산층은 소득과 고용지표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거, 교육, 여가 등 질적인 측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성근·이준협, 2015).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안정적인 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확대와 강화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중산층 강화는 내구재 등 한 경제의 소비 기반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윤희숙, 2013).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은 주요 소비주체인 중산층의 확대와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선거에서 중산층 관련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이들 정책이 사회복지의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나아가 중산층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¹⁾ 중산층의 확대와 강화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고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lor & Zeira, 1993). Easterly(2001)는 실증분석을 통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수준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반면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Clarke, 1995).

한편 중산층의 강화는 사회적 안정성과 정치적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중산층은 여가활동, 교육, 여론 등 사회적 트렌드와 생활의식을 주도하고 계층 간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한다(윤희숙, 2013). 그리고 중산층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층으로서 정치다원화와 민주화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에 적합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산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기준에 따른 중산층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중산층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특히 개인 혹은 가구가 소유한 부(wealth)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산층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또한 부는 개인 혹은 가구가 직면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도록 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의 수준은 중산층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산층 부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중산층의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경우 실제 중산층을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상이 불명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 중산층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적 중산층을 분석함으로써 중산층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eisbrod & Hansen(1968)가 제안한 소득-순자산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산층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계층 이동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순자산가치는 저량(flow)인 순자산을 연금화(annuitizing)하여 유량(flow)인 소득에 합산하는 개념이다. 순자산의 완전한 유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소득-순자산가치의 개념에 기초하여 중산층을 분류하는 방식은 중산층의 실제적 규모를 추정하고 상대적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 중산층의 다양한 개념과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 및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중산층의 분류 방식(소득, 자산, 소득-자산)에 따른 중산층 규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V장에서는 소득-자산기준 중산층의 특징과 계층이동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후, 로짓모형(Logit model)을 통해 계층 간 이동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장은 요약 및 시사점이다.

1) Adelman & Morris(1967)와 Landes(1998) 등 주요 경제사학자들은 중산층이 서구의 경제발전을 이끈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 경기연구원

II. 중산층 개념 및 선행 연구

1. 중산층의 개념

중산층은 사전적으로 ‘상위계층(upper class)과 노동계층(working class) 사이의 사회집단’으로 정의된다.²⁾ 경제학계나 언론에서는 주로 중산층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위치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을 중간소득층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중산층 규모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사회에서 중산층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거나 시점 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량화가 필요한데, 중간소득층을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계산의 편리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이다.³⁾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중간소득층을 어떻게 정의(어느 정도의 소득수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것 역시 가치판단을 내재하고 있다(김미곤, 2014). 나아가 소득 기준으로만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중산층은 사회통합과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계층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서 중산층 규모와 비중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면, 소득 등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 심리적 기준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⁴⁾ 이런 이유로 인해, 중산층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특정한 ‘사회적 관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분석의 목적과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김미곤, 2014). 한국개발연구원 외(2013)는 중산층의 다면적 측면을 반영하여 중산층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지니며,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게 원종학(2013)은 경제·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이고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집단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중산층이 갖는 의미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경제적, 사회적, 주관적 관점)으로 중산층을 개념화할 수 있다(Pressman, 2001; 김미곤, 2013).

- 경제적 관점 : 생활수준의 경제력(절대적 방식)을 갖추고 있거나 소득분포에서 중간 소득(상대

적 방식)에 해당하는 계층

- 사회적 관점 : 어느 수준 이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사회·정치 참여를 하는 계층
- 주관적 관점 : 스스로가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지닌 계층

<표 1> 주요 기관 및 정부의 중산층 분류 기준

기준지표		기관	중산층 분류 기준 및 항목
경제적 기준	절대적 방식	World Bank	1인당 하루 소비지출 \$4~\$20 (2005년 PPP기준)
		ADB	1인당 하루 소비지출 \$2~\$20 (2005년 PPP기준)
	상대적 방식	OECD	중위가구소득의 50~150%
		LIS	중위가구소득의 75~125%
사회적 기준	미국정부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보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	
	프랑스정부	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활동, 악기 연주능력, 약자 위한 봉사활동 등	
	영국정부	여가활동, 스포츠활동, 사회네트워크, 봉사활동, 교육, 정치참여 등	
주관적 기준			본인의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

자료 : Pressman(2001); 김미곤(2013); 이준협(2013).

경제적 관점은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각기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소득의 절대적 수준(개인노동소득)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OECD와 LIS(Luxembourg Income Survey)는 소득의 상대적 수준(중위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상대적 방식, 특히 OECD(1995)가 제시한 ‘중위가구소득의 50~15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사회적 관점은 좋은 교육, 안정적 직장경력, 합리적 태도 등 사회경제적 기준과 행동특성의 집합에 기초하여 중산층을 측정하는 방식이다(Pressman, 2001; Coleman & Rainwater, 1978).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주택소유, 교육, 의료,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기준을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정부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산층의 사회적 역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관점은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산층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측정된 중산층 기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기도 한다. 실제 이준협(2013)의 연구에 따르면, 중위가구소득 150% 이상인 고소득층의 22.7%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위가구소득 50~150%인 중간소득층의 54.9%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윤희숙(2013)은 중산층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의식 간의 차이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로 인해 ‘중산층 압박(middle class squeeze)’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⁵⁾

2) Oxford Online Dictionary(<http://www.oxforddictionaries.com/>).

3) 중산층을 중간소득층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데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중산층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논쟁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윤자영 외, 2014).

4) 김미곤(2013)은 중산층 강화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정치적 안정성, 사회통합, 성장기반이라는 국가적 차원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 삶의 불안감 완화, 행복감 등 개인적 차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2. 선행 연구

중산층과 관련한 연구는 Thurow(1984)와 Lawrence(1984)의 선도적 연구로부터 본격화됐다. 이들은 미국의 가계자료를 이용해 중산층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고, 196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중산층 감소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Horrigan and Haugen(1988)은 중산층 이탈이 대부분 상위층으로 이동한 결과임을 밝혔고, Duncan, et al.(1991)은 1980년대 이후 경기나 인구구조가 미국 중산층의 비중 감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중산층의 규모 추이, 중산층 이탈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강성진 외(2010)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경우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산층은 1997년 49.0%에서 1999년 53.2%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00년부터 하락과 상승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학(2013) 역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한국의 중산층의 비중이 1999년 55.09%에서 2005년 52.83%까지 하락하다가 2008년에는 다시 52.83%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남준우(2007)는 ‘중위소득의 75~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중산층 비중은 1998년 42.3%를 기록한 후 2004년 4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이 상위층보다는 하위층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석상훈(2008)은 ‘중위소득의 7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1998~2005년 동안 중산층의 추이를 파악한 결과, 중산층이 1998년 46.38%에서 2005년 42.32%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경준·최바울(2008)은 절대적 기준(중위 60%에 속한 가구)과 상대적 기준(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을 모두 이용해 중산층을 정의하고 그 규모를 파악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절대적 기준(중위 60%)으로 파악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하락했으나 2006년에는 54.7%로 상승했다. 상대적 기준(중위소득의 50~150% 구간)으로 파악한 중산층의 비중은 1996년 68.5%를 기록한 후 2006년 58.5%로 하락세를 보였다. 박소현 외(2013)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해 중산층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절대적 기준(중위 60%)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55.0~55.8%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기준(중위소득 50~150% 구간) 중산층의 비중은 2006년 64.6%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63.1%까지 하락한 후 2012년 65.0%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2013)은 경제학적 접근 방식으로 중산층을 파악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도를 했는데, 경제적 파악에 있어 소득 외에 소비라는 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개인의 경제력은 순자산과 미래

소득이 통합된 개념으로, 단기적 유량으로서의 소득은 개인의 경제력을 단지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항상소득가설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비지출 기준으로 중위 60%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비지출 점유율은 1992년 53.4%에서 2002년 55.0%까지 상승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2012년 5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소비지출 중위값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할 경우 중산층 비중은 1992년 76.9%에서 2002년 79.0%까지 상승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2012년 7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준협(2013)은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을 통해 중산층을 파악하고 이를 ‘체감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 1,015명 중 OECD 기준으로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구간)에 속하는 경우는 61.9%인데 반해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은 51.8%에 불과해 OECD기준 중산층(61.9%)보다 10.1%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기준으로 중산층을 파악하는 경제학적 접근 방식과 주관적 인식에 따라 중산층을 파악하는 경우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산층의 규모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사용된 통계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약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중산층의 이탈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국내에서 다수 진행됐다. 강성진 외(2010)는 1997년과 2007년 중산층 가구의 계층이동을 비교한 결과, 중산층의 9.0%는 하위층으로 이동, 45.3%는 중산층에 잔류, 45.7%는 상위층으로 이동함을 보였다. 중산층의 이탈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17세 미만 가구원수와 60세 이상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가 기혼이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도시 거주자인 경우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원종학(2013)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1999~2008년 동안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탈할 확률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탈할 확률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16%였으나 2002~2005년은 13%로 3%p 정도 하락하였으나 2005~2008년은 15%로 다시 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원인과 관련해서는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탈한 가구의 경우 5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반면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팬클럽은 일자리 여부가 소득계층 간 이동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중산층의 이탈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근로소득이며, 따라서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상태가 소득계층 이동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했다.

김미곤(2014)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2005년 대비 2011년 중산층의 이탈 확률과 이탈 가구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2005년 중산층이었던 사람은 2011년에 12.0%가 고소득층으로 계층 상승하고, 77.6%는 중산층에 머물며, 10.3%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들은 평균 가구원 수 감소라는 특징을 보였는데,

5) 예를 들어, 경제·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가계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체감적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윤희숙, 2013).

이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주 소득자와의 가구 분리가 가구원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지위를 하락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대다수가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소득계층이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아진다는 특징도 보였는데, 특히 노인 가구 중 지속적으로 중산층에 머물러 있는 가구는 네 가구 중 한 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micro-data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중산층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이 있으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중산층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인다.⁶⁾ 우리는 시계열 확보 및 데이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계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계층 간 이행의 특성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12차 조사)부터 이용 가능한 최근 조사년도인 2013년(17차 조사)를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중산층의 다양한 개념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 중산층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절대적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대적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상대적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위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가구원들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한 유량(flow)의 개념이다. 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여력이 증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난다. 따라서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중산층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중산층을 현재의 소득 수준만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소득에 기반 접근은 가구나 개인이 완전히 이용 가능한 자원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Brandolini et al., 2010). 현재 소득으로 측정된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성도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구의 저축이 증가하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 실제 소비여력은 감소한다. 따라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구의 경제적 대응력, 특히 자산(assets)의 규모도 중산층을 측정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

6) 예를 들어, 2011년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로 측정된 전국의 중산층 비율은 64.0%로 나타나 『한국노동패널조사』로 측정된 값에 비해 8.7%p 높다.

7) 국내에서 사회계층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자산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빈곤층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

어떤 시점에서 측정된 가계 자산의 규모는 그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총계인 저장(stock)이다. 중산층 분석에서 자산의 역할은 개별 가구의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⁸⁾ 먼저 개별 가구의 측면에서 자산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완충재고(buffer stock)’의 역할을 담당한다(정지운·김주현, 2014). 특히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한 경우에 자산은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갑작스런 소득 감소가 발생할 때, 가구나 개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자산은 예기치 못한 소득변동에 대응하여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smoothing)하는데 도움이 된다(Morillas, 2007). 또한 자산은 가구나 개인들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Sherraden, 1991; Sorensen, 2000; Spilerman, 2000).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 집합은 그가 지닌 부존자원에 의존하고, 따라서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만큼 기회도 확장이 된다. 따라서 한 가구의 자산 형성은 빈곤 탈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다.⁹⁾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을 고려하는 것은 정부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을 분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상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산층 규모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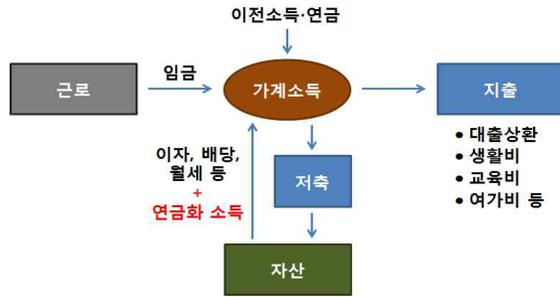
어졌다(강성민·유태균, 2009; 임병인, 2012; 정지운·김주현, 2014). 한편 World Bank(2001)는 자산기반 빈곤층 분석과 관련하여 자산기반 측정은 ‘빈곤(poverty)’보다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8) Wolff(2012)는 다음의 6가지 이유로 인해 자산이 가계 복리수준 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① 주택은 그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자산은 소유자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소비의 원천이고, ③ 금융자산은 실업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④ 자산은 소득 수준 이상으로 가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⑤ 자산은 소득과 달리 여가와 상충관계에 있지 않고, ⑥ 대의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배분은 부(wealth)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9) Sorensen(2000)은 개인의 부(wealth)가 ‘삶의 조건으로서의 계급(class as life conditions)’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0)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이 하위층인 가구를 경제적 중산층에 포함하면 중산층 규모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자산은 중산층 이상이지만 소득이 저소득층인 가구를 경제적 중산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중산층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1] 가계의 소득, 자산, 지출 흐름도



우리는 먼저 소득중산층과 자산중산층을 구분하여 분석한 후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소득-자산중산층의 특성을 분석한다. 소득중산층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사회보험(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고용보험 및 기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기타정부보조금(기초노령연금 등), 근로장려세제 지원금(2010년부터 포함)을 합한 소득이다. 한편, 자산중산층은 순자산(net worth)을 기준으로 중위자산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자산으로 구성되고, 부채(잔액기준)는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기타부채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Weisbrod & Hansen(1968), Brandolini et al.(2010), 정지운·김주현(2014) 등이 빈곤층 연구에서 사용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순자산의 연금가치(annuity value)를 합한 소득-순자산가치(income-net worth)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순자산가치 중위가구의 50~150%를 소득-자산중산층으로 정의한다.¹¹⁾ 여기서 순자산의 연금가치는 순자산을 남아있는 수명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다. 실질이자율을 ρ , 연금수령 기간(남은 수명)을 n 이라고 하면, 현재 순자산(NW)의 연금가치(AN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W_t = \left(\frac{\rho}{1 - (1 + \rho)^{-n}} \right) NW_{t-1}$$

여기서 $[\rho / (1 - (1 + \rho)^{-n})]$ 는 자산의 가중 평균수익률이다.

가처분소득(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 제외)을 Y 라고 하면, 현재 소득-자산가치(AY)는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연금가치의 합이 된다.

$$AY_t = Y_t + \left(\frac{\rho}{1 - (1 + \rho)^{-n}} \right) NW_{t-1}$$

11) 소득과 자산의 연금가치를 합산한 소득-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가계부문의 생애(lifetime) 소득수준에 따라 중산층을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위 식의 모든 변수는 실질변수이다. ρ 는 1%(국공채 장기이자율 3%, 장기물가상승률 2% 적용)로 가정한다. n 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대여명에서 현재 가구주의 나이를 뺀 값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남은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남은 기대여명이 보다 긴 값을 선택한다.¹²⁾

소득계층과 소득-자산계층의 경우, 가구당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균등화($\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값)한 값을 사용한다. 또한 소득, 자산, 소득-자산의 수준을 시점 간 비교할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값을 사용한다.

<표 2> 중산층 분류

분류	기준	범위
소득중산층	가처분소득	중위가구의 50~150%
자산중산층	순자산	중위가구의 50~150%
소득-자산중산층	가처분소득 + 순자산 연금가치	중위가구의 50~150%

주 : 소득, 소득-자산 계층의 경우,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균등화($\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값)한 값을 사용함.

IV. 측정 기준별 중산층 규모 비교

1. 중산층 기준별 범위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실질균등화가구소득(2010년 물가 기준)의 중위값은 2,026만원이고,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013~3,039만원이다. 2008~2013년 동안 소득중위값은 연평균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3.2%와 비교할 때 증가 속도가 훨씬 낮았다.¹³⁾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실질균등화가구소득의 평균값은 2,451만원으로,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425만원 높았다. 이는 2008년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인 343만원에 비해 더욱 격차가 커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실질가구자산의 중위값은 2013년 기준으로 1억 2,353만원이고, 자산중산층 범위는 6,176만원에서 1억 8,529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가구자산의 중위값은 1,773만원이 증가했으나, 평균 가구자산은 2,065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

12) 기대여명은 분석 편의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2013~2060년 평균 기대여명(남자 82.5세, 여자 87.7세)을 분석 기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현재 나이가 기대여명보다 많은 경우에는 $n=3$ 을 적용한다.

13) 2003~2008년 동안에는 실질균등화가구소득의 중위값은 연평균 2.9%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였다.

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자산을 연금화하여 소득과 합산한 소득-자산 기준의 경우, 2013년에 실질균등화 중위값이 2,473만원이고 소득-자산중산층 범위는 1,236~3,709만원이었다. 소득-자산 기준 실질균등화 중위값은 소득 기준에 비해 447만원이 높았다. 이는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창출된 가치가 가처분 소득에 추가된 부분으로, 실질균등화가구소득의 중위값을 22.0%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표 3> 중산층 분류별 중위값 및 평균값(2010년 물가기준)

구분		2008년	2013년	증감
소득 중산층	중위값	1,851	2,026	175
	중산층 범위	926~2,777	1,013~3,039	87~262
	전국 평균	2,194	2,451	256
자산 중산층	중위값	10,579	12,353	1,773
	중산층 범위	5,290~15,869	6,176~18,529	886~2,660
	전국 평균	22,452	20,387	-2,065
소득-자산 중산층	중위값	2,205	2,473	267
	중산층 범위	1,103~3,308	1,236~3,709	133~401
	전국 평균	2,693	2,960	267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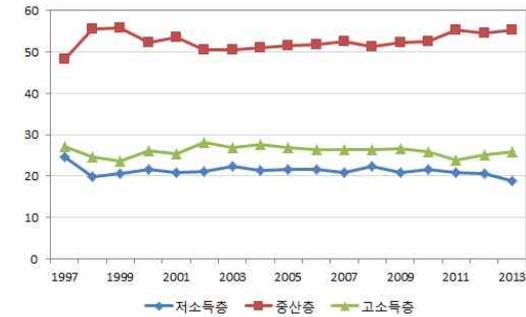
주 : 소득중산층과 소득-자산중산층은 실질균등화를 한 값이며, 자산중산층은 실질 값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2. 측정 기준별 중산층 규모 비교

전국의 소득중산층 가구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IMF사태 직후인 1999년 55.8%를 기록한 후 2002년 50.6%로 급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3년 55.2%(830.4만 가구)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은 2008년 22.5%에서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18.9%를 기록했다. 한편 고소득층 가구의 비율은 2002년 28.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 23.8%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에는 25.9%로 다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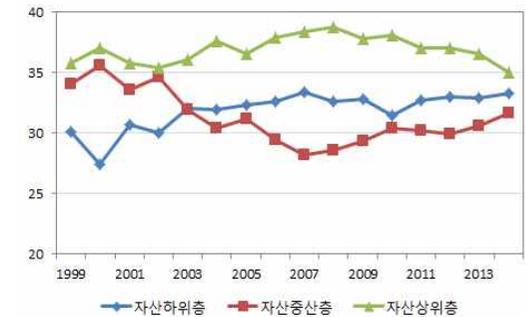
[그림 2] 소득 계층별 추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2013년 중위자산을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중산층 가구비율은 31.6%로 소득중산층 비율인 5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자산중산층 비율이 낮은 것은 자산하위층(35.0%)과 자산상위층(33.3%)의 가구 밀집도가 자산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추세적으로는 2003년 이후 자산하위층이 자산중산층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하위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중산층의 비중 상승은 주로 자산상위층의 비중 하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자산 계층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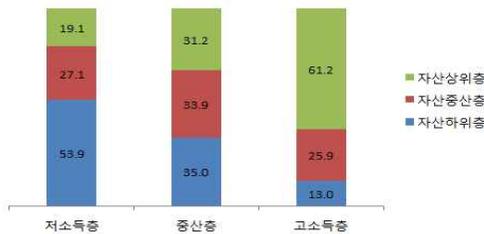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중산층인 가구의 비율은 18.8%에 불과하여 소득중산층과 자산중산층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소득중산층 가구 중에서 자산하위층은 35.0%, 자산중산층은 33.9%, 자산

상위층은 31.2%로 나타났다.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하위층인 가구는 갑작스런 소득 감소가 발생할 때,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생활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계층이다(Brandolini, et al., 2010). 특히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이 어려운 소득하위중산층의 38.9%가 자산하위층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노동근로 단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산이 부족한 소득중산층도 경제적 취약계층에 포함할 경우, 저소득층 가구와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하위층인 가구를 합한 경제적 취약계층은 전국 전체 가구의 37.9%에 이른다. 이 결과는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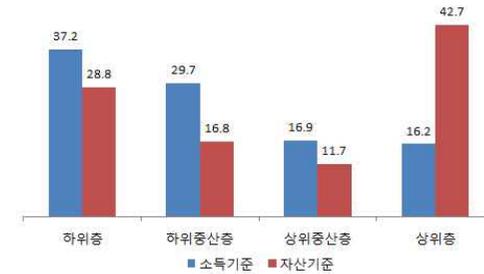
[그림 4] 소득 및 자산 계층 구조(2013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 상위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중산층 가구의 평균연령은 52.6세로 자산하위층의 51.3세보다는 높고 자산상위층의 56.4세보다는 낮았다. 자산중산층에서 연령대별 가구주의 비중은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2.9%, 31.3%로 높게 나타났고, 자산상위층에서도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31.3%, 39.2%로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고소득층은 16.2%에 불과했으나 자산상위층은 4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산(stock)의 연금화 등을 통해 소득(flow)을 창출할 수 있다면, 노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력의 확충이 민간부문 내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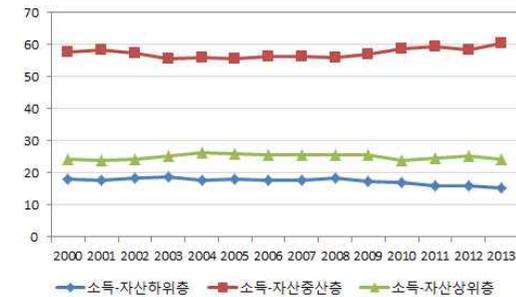
[그림 5] 60대 이상 소득 및 자산 계층 비율(2013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다음으로 소득-자산중산층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자산중산층 가구 비율은 2001년 58.4%에서 2008년 55.9%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3년 60.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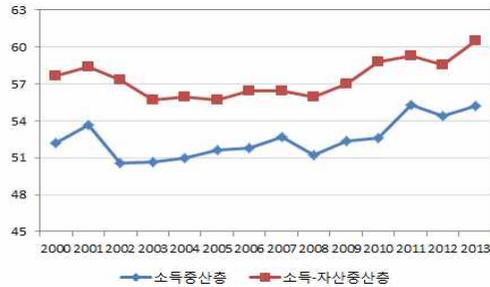
[그림 6] 소득-자산 계층별 추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소득-자산중산층 가구 비율은 소득중산층에 비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소득-자산중산층이 소득중산층에 비해 5.3%p (2008~2013년 평균 4.8%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자산 기준으로 하위층과 상위층의 가구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15.2%, 24.3%로 나타나 소득 기준보다 낮았다.

[그림 7] 소득중산층 및 소득-자산중산층 비율 추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한편 소득중산층이면서 소득-자산중산층인 가구의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9.5%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계층과 소득-자산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속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18.1%이었다(하위층 6.0%, 중산층 6.2%, 상위층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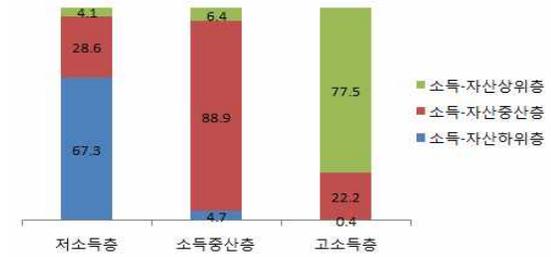
<표 4> 소득 및 소득-자산 계층 분포(2013년)

구분	소득-자산 기준				계
	계층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소득 기준	저소득층	12.4	5.3	0.8	18.5
	중산층	2.6	49.5	3.6	55.7
	고소득층	0.1	5.7	20.0	25.8
	계	15.2	60.5	24.3	100

주 : 자산 무응답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합산한 값이 소득 기준의 값과 차이가 발생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소득중산층 중에서 소득-자산중산층인 가구는 88.9%이고, 소득-자산상위층은 6.4%, 소득-자산하위층은 4.7%로 나타나 소득중산층과 소득-자산중산층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도 소득-자산상위층이 77.5%로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자산하위층이 6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소득-자산중산층이 28.6%, 소득-자산상위층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은퇴 등으로 인해 비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지만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가구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림 8] 소득 및 소득-자산 계층 구조(201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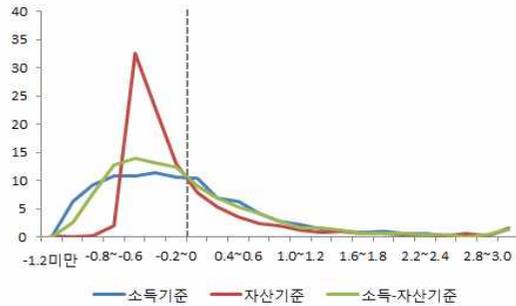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중산층 규모는 중산층을 어떤 측면에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소득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규모는 자산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만, 소득-자산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규모에 비해서는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기준으로만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중산층 규모를 다소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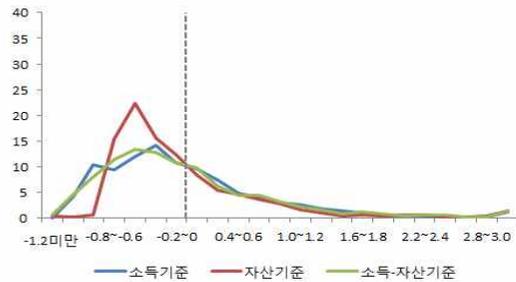
[그림 9]와 [그림 10]은 소득, 자산,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표준화된 분포도이다.¹⁴⁾ 가구의 밀집도는 자산 기준, 소득-자산 기준, 소득 기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분포도가 평활화된 모습이며, 가구 평균 근방에 속한 가구 수가 감소하고 하위에 속한 가구수가 증가했다. 소득-자산 기준으로 -0.6~0.6 구간에 속한 가구의 비중이 2008년 60.9%에서 2013년 57.4%로 하락한 반면, -0.6 이하의 구간에 속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23.2%에서 24.6%로 상승했다. 이는 중위값을 사용했을 때보다 평균값을 사용했을 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 각 기준의 scale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해 이를 조정했다. 표준화 식은 "(개별값 - 평균값) / 표준편차"이며, 개별 가구의 표준화 점수를 구해 0.2의 범위로 분포도를 그렸다.

[그림 9] 소득, 자산, 소득-자산 기준 가구의 분포(2008년)



[그림 10] 소득, 자산, 소득-자산 기준 가구의 분포(2013년)



<표 5> 소득-자산 계층별 가구주의 성별(2013년)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하위층		55.7 (11.0)	44.3 (31.0)
	중산층		
중산층	하위중산층	76.4 (34.2)	23.6 (37.8)
	상위중산층	84.3 (27.8)	15.7 (18.6)
상위층		88.7 (27.1)	11.3 (12.4)
평균		78.2 (100)	21.8 (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성별 소득-자산계층 비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소득-자산중산층의 평균연령은 53.0세이고, 상위중산층과 하위중산층 모두 60대 이상 가구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소득 기준 중산층의 경우 50대 가구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6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각 경제적 계층에서 60대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소득 흐름을 창출할 경우 60대 가구주의 소득빈곤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소득-자산중산층 특징 및 계층 이동요인 분석

1. 소득-자산중산층의 특징

2013년 기준으로 성별 중산층은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계층에 가구가 많이 분포해 있는 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낮은 계층에 밀집된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6> 소득-자산 계층별 가구주의 연령(2013년)

단위 : 세, %

구분	평균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하위층	62.3	3.1 (15.0)	5.1 (6.4)	14.5 (10.8)	20.0 (11.4)	57.4 (23.8)	
중산층	하위중산층	52.8	6.2 (67.1)	14.9 (42.8)	21.2 (36.2)	24.9 (32.3)	32.7 (30.8)
	상위중산층	53.4	1.9 (14.9)	15.1 (32.0)	24.1 (30.3)	28.6 (27.4)	30.2 (21.0)
상위층	56.5	0.4 (3.0)	9.6 (18.9)	19.5 (22.7)	32.6 (28.9)	37.8 (24.4)	
평균	55.3	3.2 (100)	12.2 (100)	20.5 (100)	27.0 (100)	37.1 (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연령별 소득-자산계층 비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학력별 소득-자산중산층은 고졸 가구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많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 58.1%가 상위층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7> 소득-자산 계층별 가구주의 학력(2013년)

단위 : %

구분	고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하위층	58.5 (30.4)	29.4 (13.8)	11.2 (5.3)	0.8 (2.7)	
중산층	하위중산층	31.3 (36.9)	35.6 (37.8)	31.0 (33.3)	2.2 (15.7)
	상위중산층	23.1 (20.1)	33.3 (26.1)	39.1 (30.9)	4.5 (23.6)
상위층	15.7 (12.6)	30.8 (22.3)	41.6 (30.5)	11.9 (58.1)	
평균	29.6 (100)	32.9 (100)	32.6 (100)	4.9 (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학력별 소득-자산계층 비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중사상지위별 중산층은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 가구주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층 가구주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44.6%로 높은 반면, 하위층은 실업자 비중(36.8%)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32.1%)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결과는 가구주의 정규직 여부가 소득 수준과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소득-자산 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2013년)

단위 : %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	무급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하위층	11.9 (5.1)	9.1 (21.8)	10.3 (24.2)	9.2 (6.4)	0.6 (11.8)	0.2 (36.8)	58.7 (32.1)	
중산층	하위중산층	35.1 (34.1)	8.0 (43.4)	8.8 (47.1)	19.8 (31.5)	0.7 (30.7)	0.1 (27.8)	27.5 (34.1)
	상위중산층	43.6 (31.2)	4.9 (19.7)	5.5 (21.6)	26.5 (31.1)	0.9 (29.4)	0.1 (35.4)	18.3 (16.8)
상위층	44.6 (29.6)	4.0 (15.0)	1.9 (7.1)	28.5 (30.9)	1.0 (28.1)	0.0 (0.0)	20.0 (16.9)	
평균	36.0 (100)	6.4 (100)	6.6 (100)	22.0 (100)	0.8 (100)	0.1 (100)	28.1 (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경제활동참여 상태별 소득-자산계층 비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소득-자산중산층의 평균가구원수는 2.87명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 4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인의 비중이 높았다. 하위층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1인 가구에서 소득 빈곤과 자산빈곤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소득-자산 계층별 가구 규모(2013년)

단위 : 명, %

구분	평균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하위층	2.12	43.1 (30.3)	24.8 (17.2)	14.5 (11.6)	12.8 (6.7)	3.8 (9.4)	0.9 (12.0)	
중산층	하위중산층	2.76	23.2 (37.1)	22.2 (34.8)	19.0 (34.5)	27.5 (33)	7.2 (39.9)	0.9 (27.5)
	상위중산층	3.01	16.0 (18.9)	20.4 (23.6)	20.8 (27.8)	34.6 (30.6)	6.6 (27.2)	1.6 (33.5)
상위층	3.05	12.5 (13.7)	22.8 (24.4)	21.0 (26.0)	36.2 (29.7)	6.2 (23.5)	1.4 (27.0)	
평균	2.80	21.9 (100)	22.3 (100)	19.2 (100)	29.2 (100)	6.3 (100)	1.2 (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가구규모별 소득-자산계층 비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소득-자산중산층 가구의 평균근로자수는 1.22명이고, 가구당 근로자수 비율은 42.7%였다. 소득-자산계층이 높아질수록 가구당 근로자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자산중산층의 가구당 근로자 비중은 42.5%이고, 역시 상위층일수록 가구당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 소득-자산 계층별 근로자수와 근로자 비중(2013년)

단위 : 명, %

구분	평균근로자수(A)	평균가구원수(B)	근로자 비중(A/B)	
하위층	0.58	2.12	27.2	
중산층	하위중산층	1.09	2.76	39.5
	상위중산층	1.40	3.01	46.7
상위층	1.46	3.05	47.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소득-자산중산층의 가구당 총자산은 2억 666만원으로 소득중산층의 가구당 총자산인 2억 79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득-자산하위층의 가구당 총자산은 6천 849만원이었으나, 저소득층 가구당 총자산은 1억 3,762만원으로 약 2배 많았다. 이는 소득하위층에 속한 가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가 소득-자산중산층과 상위층에 포함되고, 고소득층에 속한 자산이 적은 가구가 소득-자산중산층과 하위층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자산상위층의 총자산은 고소득층의 총자산보다 약 1.2배 많았고, 계층 간 순자산 격차도 소득-자산 기준

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편 모든 계층에서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 비율이 매우 높았고 상위계층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11> 소득-자산 계층별 가구당 자산 및 부채 규모(2013년)

단위 : 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잔액	순자산	
	총자산	부동산	세보증금	금융	기타자산			
하위층	6,849	5,049 (73.7)	1,176 (17.2)	519 (7.6)	105 (1.5)	2,322	4,527	
중산층	하위중산층	14,975	11,172 (74.6)	1,981 (13.2)	1,358 (9.1)	463 (3.1)	2,275	12,700
	상위중산층	28,266	22,364 (79.1)	2,779 (9.8)	2,303 (8.1)	820 (2.9)	5,030	23,236
상위층	56,464	46,375 (82.1)	3,121 (5.5)	5,600 (9.9)	1,368 (2.4)	8,943	47,521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2. 소득-자산계층 간 이동 확률 및 특성

본 절에서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전국 계층 간 이동 확률과 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한다. 소득-자산계층 간 이동의 비교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기인 2008년과 『한국노동패널』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 시점인 2013년으로 한다.

<표 12>는 2008~2013년 사이에 소득-자산계층의 이동 비율을 보여준다. 소득-자산중산층 가구의 유지 비율은 74.0%로, 하위층 유지 비율 51.2%, 상위층 유지 비율 62.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산층을 하위중산층과 상위중산층으로 구분할 경우, 하위중산층의 유지 비율은 54.7%, 상위중산층의 유지 비율은 39.4%로 나타나 상위중산층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자산 기준으로 중산층 가구 중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8.7%이고 상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17.3%로 나타나 분석 기간 동안 상향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층으로 이동한 중산층 중에서 하위중산층이 12.4%, 상위중산층이 4.0%를 차지했다. 한편, 소득-자산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46.5%였으며, 이 중에서 하위중산층으로 38.0%, 상위중산층으로 8.5%가 이동했다. 따라서 소득-자산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이동은 대부분 하위중산층과 하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소득-자산 계층 이동 비율

구분		2013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합계	
			하위중산층	상위중산층			
2008년	하위층	51.2	38.0	8.5	2.3	100	
	중산층	하위중산층	12.4	54.7	23.2	9.7	100
		상위중산층	4.0	29.5	39.4	27.1	100
	상위층	2.5	9.6	25.0	62.9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표 13>은 전국 전체 가구에서 소득-자산 계층의 이동 비율이다. 분석 기간 동안 소득-자산 계층 간 이동에서는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계층 간 이동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하위중산층에서 상위중산층으로의 이동으로 전체 가구의 7.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이동은 상위중산층에서 하위중산층으로의 이동으로 전체 가구의 7.2%였다. 따라서 중산층 내에서 계층 간 이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전체 가구에서 소득-자산 계층 이동 비율

구분		2013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합계	
			하위중산층	상위중산층			
2008년	하위층	9.3	6.9	1.5	0.4	18.2	
	중산층	하위중산층	3.9	17.4	7.4	3.1	31.8
		상위중산층	1.0	7.2	9.7	6.6	24.6
	상위층	0.6	2.5	6.4	16.0	25.4	
	합계	14.9	34.0	25.0	26.1	100	

주 : 2008년과 2013년 조사에 모두 포함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층 이동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산층의 비율과는 차이가 발생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표 14>와 <표 15>는 분석기간 동안 전국 소득-자산계층 간 이동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소득-자산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의 하향 이동은 60대 이상 고령층, 고졸 이하, 고용주·자영업자 및 비경제활동 가구주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72.8%, 여성이 27.3%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의 경우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20%)보다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하향 이동한 가구주의 연령대 비율은 60대 이상 45.1%, 50대 22.8%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 비율은 고졸 미만 52.5%, 고졸 34.8%, 대졸 1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 74.1%, 여성 25.9%였으며, 여성 가구주의 경우 하위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4%)보다 상향 이동 비율이 낮았다. 연령대 비율은 60대 이상 38.1%, 40대 25.4%, 50대 22.8% 순으로 나타나,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이동이 고령층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비율은 고졸 미만 49.6%, 고졸 30.9%, 대졸 17.4% 순으로 나타나, 저학력 계층에서 중산층과 하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14> 소득-자산 계층 이동 가구주의 특성별 비율(2008~2013년)

구분		단위 : %		
		중산층→하위층	하위층→중산층	중산층→중산층
성별	남성	72.8	74.1	84.8
	여성	27.3	25.9	15.2
연령대	20대	1.4	1.9	2.4
	30대	11.3	11.8	15.7
	40대	19.4	25.4	30.8
	50대	22.8	22.8	24.6
	60대 이상	45.1	38.1	26.5
학력	고졸 미만	52.5	49.6	33.2
	고졸	34.8	30.9	37.6
	대졸	12.2	17.4	27.8
	대학원 이상	0.5	2.1	1.5

주 : 항목별 비중은 2008년 기준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분석기간 동안 소득-자산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20.7%→13.3%), 임시직(11.9%→8.5%)과 고용주·자영업자(22.8%→18.9%) 비율이 하락하고, 비경제활동(32.5%→47.7%)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형태에서는 자가 보유 비중(49.3%→43.7%)이 하락하고, 월세 비중(15.7%→24.9%)이 증가했다. 한편, 가구당 근로자수 비중은 2008년 39.0%에서 2013년 32.4%로 하락했다. 한편 소득-자산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24.7%→25.8%)과 고용주·자영업자(10.8→13.0%)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비경제활동(40.2%→32.0%)의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형태는 월세(14.6%→15.8%) 비중이 소폭 상승했고, 가구당 근로자수 비중은 2008년 33.7%에서 2013년 43.6%로 상승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가구주의 직업 유무, 자가 보유, 가구당 근로자수 비중 등이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5> 소득-자산 계층 이동 가구주의 특성별 비율 변화

단위 : %, 명

구분		중산층→하위층		하위층→중산층		중산층→중산층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취업 상태	상용직	20.7	13.3	24.7	25.8	38.5	36.3
	임시직	11.9	8.5	6.3	8.6	4.6	6.6
	일용직	10.6	10.9	10.8	13.0	8.0	9.0
	고용주/자영업자	22.8	18.9	17.6	19.4	26.8	25.4
	무급종사자	1.6	0.7	0.3	1.2	0.4	0.8
	실업자	0.0	0.0	0.2	0.0	0.0	0.1
	비경제활동	32.5	47.7	40.2	32.0	21.8	21.8
입주 형태	자가	49.3	43.7	53.1	52.9	63.8	68.9
	전세	29.4	21.6	27.1	26.6	22.5	16.7
	월세	15.7	24.9	14.6	15.8	10.3	11.4
	기타	5.6	9.8	5.3	4.7	3.4	3.0
평균근로자수(A)		1.1	0.8	0.9	1.2	1.3	1.3
평균가구원수(B)		2.8	2.6	2.8	2.7	3.1	3.1
근로자비중(A/B)		39.0	32.4	33.7	43.6	42.9	4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micro-data.

3. 중산층 이동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중산층 이탈 혹은 편입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인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한다. 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_i = \alpha + \beta X_i + u_i$$

$$Y_i = \begin{cases} 1 : \text{현재 계층을 이탈할 경우} \\ 0 : \text{현재 계층을 유지할 경우} \end{cases}$$

우리는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탈시키는 요인과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위 식에서 종속변수인 Y가 중산층 가구인 경우 중산층을 유지하면 0, 하위층으로 이탈하면 1이 된다. 그리고 Y가 하위층 가구인 경우 하위층을 유지하면 0, 중산층으로 이탈하면 1이 된다.

설명변수인 X는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으로 구성한다. 가구의 특성 변수로는 가구당 근로자수, 65세 이상 가구원수, 17세 미만 가구원수, 주택 보유 여부¹⁵⁾를 선택했다. 그리고 가구주의 특성 변수로는 가구주의 여성 여부, 기혼 여부, 연령, 학력, 상용직 여부, 자영업 및 고용주 여부 등으로 선정

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계층 간 이동에서 나타난 가구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표 16>과 <표 17>은 소득 기준과 소득-자산 기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두 기준에서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의 이동은 근로가구원수가 적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학력이 낮고, 비상용직인 경우에 이동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증분석 결과는 앞 절에서 계층 간 이동 가구주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소득 기준에서 65세 이상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소득-자산 기준에서는 이들 변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소득의 흐름이 개선되어 경제적 계층 하락의 압력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각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의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살펴보자. 한계효과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이동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먼저 근로자수의 한계효과는 소득 기준으로 -0.034, 소득-자산 기준으로 -0.018이다. 이는 가구당 근로자수가 1명 감소할 경우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의 이동확률이 각 기준으로 3.4%, 1.8% 증가한다는 의미로서, 소득 기준의 경우에 계층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주택 보유의 한계효과는 소득 기준으로 -0.052, 소득-자산 기준으로 -0.067로 나타나, 소득-자산 기준에서 주택 보유의 여부가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의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여부의 한계효과도 소득-자산 기준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직장의 안정성이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학력의 한계효과는 소득 기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16> '중산층 → 하위층 이동' 실증분석 결과(2008~2013년)

특성	구분	소득 기준			소득-자산 기준			
		변수	계수값	한계효과	p-value	계수값	한계효과	p-value
가구	근로자수		-0.422	-0.034	0.000	-0.273	-0.018	0.023
	65세 이상		0.301	0.024	0.015	-0.009	-0.001	0.959
	17세 미만		-0.046	-0.004	0.630	-0.088	-0.006	0.489
	주택 보유		-0.612	-0.052	0.000	-0.907	-0.067	0.000
가구주	여성가구주		0.185	0.016	0.387	0.073	0.005	0.782
	기혼		-0.135	-0.011	0.503	-0.176	-0.012	0.511
	연령		0.037	0.003	0.000	0.009	0.001	0.421
	학력		-0.540	-0.044	0.000	-0.525	-0.034	0.000
	상용직		-0.404	-0.031	0.022	-0.561	-0.035	0.012
	자영업/고용주		-0.224	-0.017	0.162	-0.315	-0.019	0.136

15) 가계는 소득의 저축형태로서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를 소득 수준의 함수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여기서는 계층이동 결정요인을 소득 및 소득-자산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주택 보유를 설명변수에 추가했다.

다음으로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자.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은 대체적으로 근로가구원수가 많고, 주택을 보유하고, 가구주가 연령이 낮은 경우 이동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과 소득-자산 기준 모두에서 65세 이상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빈곤층에 속한 고령층 가구의 경우 중산층으로 편입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 기준에서는 가구당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소득-자산 기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소득-자산 기준에서 주택 보유 여부와 가구주의 학력이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기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소득-자산 기준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의 한계효과가 0.230으로 상향 계층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산층과 하위층 간 계층이동에서 주택 보유 여부의 한계효과(절대 값)는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산의 형성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빈곤 탈출을 위해 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 기준에서는 가구당 근로자수의 한계효과가 0.09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의 이동의 경우보다 한계효과와 절대값이 더 크다. 이는 하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유인 정책이 중산층 확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7> '하위층 → 중산층 이동' 실증분석 결과(2008~2013년)

특성	구분	소득 기준			소득-자산 기준		
		계수값	한계효과	p-value	계수값	한계효과	p-value
가구	근로자수	0.386	0.090	0.001	0.062	0.015	0.699
	65세 이상	-0.295	-0.069	0.017	-0.391	-0.097	0.031
	17세 미만	-0.013	-0.003	0.894	-0.208	-0.052	0.120
	주택 보유	0.208	0.048	0.145	0.938	0.230	0.000
가구주	여성가구주	-0.226	-0.053	0.230	-0.273	-0.067	0.314
	기혼	0.280	0.066	0.153	0.450	0.111	0.097
	연령	-0.041	-0.009	0.000	-0.031	-0.008	0.007
	학력	0.081	0.019	0.450	0.336	0.083	0.022
	상용직	-0.250	-0.057	0.220	0.236	0.059	0.385
	자영업/고용주	0.159	0.038	0.421	0.406	0.101	0.152

지금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경제적 중산층을 분류하여 이들의 추이를 상호 비교하고, 소득-자산중산층의 특성과 계층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의 규모는 측정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소득 기준만으로 중산층을 분류할 경우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60대 이상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은 소득 기준으로 46.6%였으나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54.6%로 8%p 높게 나타났고, 하위층 비율은 소득 기준으로 37.2%였으나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23.8%로 13.4%p 낮았다.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는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크게 증가한다. 2013년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은 18.9%이지만, 저소득층과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하위층인 가구의 비중은 3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셋째, 소득 기준과 소득-자산 기준 모두에서 근로가구원수는 경제적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근로가구원수와 경제적 계층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하향 이동 혹은 상향 이동에서 근로 가구원수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득-자산 기준으로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이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동산의 보유 여부로 드러났다. 특히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이동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 자산의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빈곤 탈출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중산층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한 내 집 마련 정책을 확대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유 자산을 보다 원활히 유통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산층에 속한 대부분의 가구주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경감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유통화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노령층의 소득흐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창출의 높이고 저축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 내 2차 소득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차 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 등 근로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비경제활동인구까지도 포괄하도록 고용서비스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소득-순자산가치 개념은 중산층의 실제적 규모를 추정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량으로 자산이 갖는 안정성 제공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유통화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소득-순자산가치 개념을 현실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VI.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강성진·원종욱·이우진(2010).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성민·유태균(2009).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40권 제1호, pp. 115-138.
- 김미곤(2013). 「다차원적 중산층 개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즈』, 2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7(4) : 1-24, 한국노동연구원.
- 박소현·안영민·정규승(2013).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통계개발원.
- 석상훈(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원종학(2013).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유경준·최바울(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윤자영·윤정향·최민식·김수현·임재만·임영순·어유진(2014).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희숙(2013).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KDI 경제전망』, 30(1), 한국개발연구원.
- 이준협(2013).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안과 과제』, 13-41, 현대경제연구원.
- 임병인(2012). 「소득빈곤과 자산빈곤과의 연계성 분석」,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정지운·김주현(2014). “소득-순가치(Income-Net Worth) 개념을 활용한 노인빈곤의 재고찰” 『한국노년학』, 34(3) : 595-611.
- 최성근·이준협(2015).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현안과 과제』, 15-6,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2013).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 Adelman, I. and Morris, C. T.(1967),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Johns Hopkins Press.
- Brandolini, A., Magri, S. and Smeeding, T. M.(2010).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 267 - 284.
- Clarke, G.(1995). "More Evidence 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of Economics*, 47 : 403-427.
- Coleman, R. and Rainwater, L.(1978). *Social Standing in America: New Dimensions of Class*, Basic Books.
- Duncan, G., Smeeding T. and Rodgers W.(1991), "W(h)ither the Middle Class? A Dynamic View," Working Paper, 56, 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 Easterly, W.(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4) : 317-335.
- Galar, O. and Zeira, J.(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 35 - 52.
- Horrigan, M. and Haugen, S.(1988). "The Declining Middle-class Thesis: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111(5) : 3-13.
- Landes, D.(1998),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Norton.
- Lawrence, R.(1984).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e Brookings Review*; 3 : 3-11.
- Morillas, J. R.(2007), "Assets, Earnings Mobility and the Black/White Gap", *Social Science Research*, 36 : 808-833.
- OECD(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19.
- Pressman, S.(2001).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280, Syracuse University.
- Sherraden, M.(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M.E. Sharpe, New York.
- Sorensen, A.(2000). "Toward a sounder basis for class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523 - 1558.
- Spilerman, S.(2000).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 497 - 524.
- Thurow, L.(1984).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The New York Times.
- Weisbrod, B. A. and Hansen, W. L.(1968). "An income - net worth approach to measuring economic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58 : 1315 - 1329.
- Wolff, E. N.(2012). "The Asset Price Meltdown and the Wealth of the Middle Class", Working Paper 18559, NBER.
- World Bank(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Attacking pover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